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최신 전황

2, 4, 5, 7면

서안지구에서의
시온주의 정착자와
이스라엘 군대

8~9면

홍해 위기
3면

개혁 약속
내팽개치는 민주당

12~14면

전세 사기 피해
온전히 보상하라

16, 15면

〈노동자 연대〉가 뽑은
2023년 10대
국제·국내 뉴스 10~11면



관련 기사 4~5면

이스라엘의 잔인한 전쟁범죄

찰리 김버

이스라엘이 매일같이 자행하는 참혹한 범죄 하나하나가 보통 같으면 대서특필 감이다. 그러나 세계 언론은 팔레스타인인들의 죽음에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팔레스타인인들의 고통을 전하는 소식에 대해 “그만 하면 충분하다”라는 태도를 취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살육 뒤에는 인종 학살 논리가 있음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스라엘이 불도저로 병원을 밀어버리고 사람들을 살해하다

이스라엘군이 불도저를 동원해 가자 지구 북부 카말 아드와 병원 인근의 팔레스타인인 피란민 천막들을 깔아뭉갸고 피란민들을 압사시켰다고 의료진을 비롯한 목격자들이 증언했다.

12월 17일 일요일에 알자지라의 하니 마흐무드는 이렇게 말했다. “병원 건물을 불도저로 엄청나게 부숴서요, 병원 안뜰에 있는 사람들을 깔아뭉개

고 천막을 부숴서요, 스무 명 정도가 불도저에 깔려 잔해 아래 파묻혔습니다.”

가자지구 북부 자발리야 난민촌의 알와다 병원에서는 이스라엘군이 병원 장 아흐메드 무하나를 어딘가로 끌고 가 구급했다.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17일 일요일에 같은 지역에서 폭격으로 약 110명을 살해했다.

강제수용소에 억류돼 학대받는 구급자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이렇게 밝혔다. “가자지구 북부에서 어쩌면 수천 명에 이르는 수많은 팔레스타인인 남성과 소년, 또한 적잖은 여성과 소녀가 이스라엘군에 의해 대규모로 억류·학대당하고, 강제로 실종됐을 수 있다는 우려스런 보고들을 여럿 받았다.”

구급자 대부분이 가자지구 남쪽으로 피란하려 하다가, 혹은 주택·병원·학교 등 피란해 있던 곳에서 벌어진 군사 작전 와중에 끌려갔다고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덧붙였다. 구급

자 중에는 12세 어린아이도 있었다.

이스라엘 일간지 〈하레츠〉는 이스라엘 당국이 체포한 팔레스타인인들을 이스라엘 남부 베르세바 인근 구급시설 “스테 테만”에 구급했다고 보도했다.

이 수용소는 24시간 내내 불이 밝혀져 있으며, 구급자들은 하루의 대부분 시간 동안 눈을 가리고 수갑이 채워진 채로 구급돼 있다. 〈하레츠〉는 구급된 팔레스타인인 여러 명이 수용소 내에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이 범죄 행위를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노르웨이인 의사 매즈 길베르트는 알시파 병원 응급실 책임자인 자신의 친구와 그 가족들이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잔혹하게” 살해됐다고 밝혔다.

“절친한 친구이자 친애하는 동료인 알시파 병원 응급실 책임자 하니 알하타미 박사는 이스라엘군에 의해 잔혹하게 살해됐습니다. 박사의 부인인 사미라 지파리 박사와 그들의 다섯 자녀 쉬린·티아·사미르·와파·사라도

살해됐습니다. 겁쟁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비무장 민간인 일곱 명을 냉혹하게 살해한 것입니다.” 길베르트가 트위터에 쓴 글이다.

길베르트는 이렇게 덧붙였다. “이는 우리 모두에 대한, 전 인류에 대한 또 다른 공격입니다. 사망자들을 결코 잊지 맙시다. 우리는 맹세합니다. 우리는 알시파 병원,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을 재건할 것입니다!”



불도저로 가자지구를 파괴하는 이스라엘군

“그들은 그녀의 가족을 죽이고 그후 그녀를 죽였습니다”

팔레스타인인 소녀 도니아 아부 무흐신은, 가자지구 남부 도시 칸유니스에 있는 나세르 병원 산부인과 병동에 대한 이스라엘 공군의 폭격으로 희생된 사람의 하나다.

병원 의사 모하메드 자쿠트는 이렇게 말했다. “폭탄이 천장을 뚫고 들어와 무흐신을 직격했습니다. 부서진 머리와 피가 벽에 흠뻑려졌어요. 끔찍한 범죄입니다.”

그 며칠 전에 집이 폭격당해 무흐신은 두 다리를 절단했고, 사망 당시에는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이었다. 당시의 폭격으로 무흐신은 부상을 입었고, 그녀의 가족은 목숨을 잃었다.

무흐신의 부모님과 두 형제는 첫 번째 공격으로 모두 사망했다. 인터넷에 퍼진 영상을 보면 이스라엘의 폭격 직후 여성과 어린이들의 비명 소리가 들린다.

이스라엘이 10월 7일 사망자 숫자를 또 조정하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10월 7일 하마스 공격으로 인한 최종 사망자 숫자를 다음과 같이 조정했다. “이스라엘 국적 민간인 사망자는 695명이고, 그중 36명이 어린 아이다. 그 밖에도 보안군 373명과 외국인 71명을 더하면 총 사망자 수는 1139명이다. 이는 아직 실종 상태로 분류된 5명(그중 이스라엘인은 4명)은 포함하지 않은 수치다.” [처음에 이스라엘은 민간인 1400명이 죽었다고 주장했으나 진상이 드러날수록 그 규모는 줄고 있다.] 한편, 10월 7일 당시 이스라엘군이 이스라엘인 민간인을 살해했다는 증거는 계속 쌓이고 있다.

“마침내 그녀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적들은 도니아를 살해하고, 그녀의 희망을 모조리 살해했습니다. 적들은 경고도, 대피 명령도 전혀 하지 않았습다. 적들은 우리 병동을 폭격하기 전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쿠트의 말이다.

출처 Charlie Kimber, ‘US guts UN resolution as Palestinian death-toll exceeds 20,000 – Bulldozed and killed at a hospital’ (2023. 12. 19) / 번역 김준호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안하는

노동자연대 가입하세요

workersolidarity.org/join
문의: 02-2271-2395

노동자연대 기본입장 workersolidarity.org/what-we-stand-for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의 부산물 홍해 위기 청해부대 파견 가능성 경계해야

김영익

미국이 예멘 후티 정부를 겨냥해 홍해에 보낼 다국적 연합 함대를 결성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의 영향으로 홍해에서 위기가 불거진 것이다. 그리고 소말리아 해역 호송전대인 청해부대의 파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0월 7일 이후 후티는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을 비난하며 홍해, 특히 바브엘만데브 해협에서 이스라엘 항구로 가는 선박들을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해 왔다. 지난달 후티는 홍해를 지나는 화물선 갤럭시 리더호를 나포해 선원들을 억류했다.

12월 9일 후티 대변인 야흐야 사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가자지구에 필요한 의약품과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국적과 상관없이 이스라엘로 향하는 선박의 통행을 막을 것이다.”

홍해는 지중해와 인도양을 잇는 해협으로, 지중해와 만나는 곳에 수에즈 운하가 있다. 이 수에즈 운하와 홍해를 지나는 항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바닷길이다. 북미·유럽과 아시아를 이어 주기 때문이다. 전 세계 해상 컨테이너 물동량의 약 30퍼센트(매년 1조 달러 규모)가 홍해를 지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면서 이 뱃길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 러시아산 가스를 쓸 수 없게 된 유럽이 중동산 가스를 수에즈 운하를 거쳐 가져왔기 때문이다.

후티 정부는 홍해에서 선박을 공격해 자신들의 존재감을 국제적으로 각인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 점은 예멘 내전에 관련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외교 협상에서 후티에 유리하게 활용될 것이다.

세계 주요 해운사와 석유 다국적기업들은 이제 수에즈 운하와 홍해를 포기하고 아프리카 희망봉을 도는 우회로를 선택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운송 기간과 비용이 엄청 늘어난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팔레스타인 전쟁의 영향으로 국제 공급망이 교란되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대팔레스타인 전쟁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인플레이션을 더욱 자극할 듯하다.

이스라엘 최남단 항구 에일라트도 물동량이 85퍼센트 감소했다. 이스라엘의 해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에일라트는 이스라엘에서(지중해가 아닌) 인도양 쪽으로 향하는 유일한 항구다.

홍해 위기가 세계경제의 우환이 되자,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중요한 항로가 긴장에 휩싸였다

미 해군은 홍해에서 후티가 발사하는 미사일과 드론을 요격했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는 군사 행동을 좀 더 확대하고 있다. 12월 18일 미국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은 홍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다국적 연합 함대의 “번영 수호자 작전”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수에즈

미국 항공모함 드와이트 아이젠하워함도 홍해 입구인 아덴만으로 갔다.

그런데 다국적 연합 함대는 주로 서방군대로 구성됐고, 아랍 국가 중에는 바레인만이 참가했다.

아랍 정권들은 자국 대중의 분노를 살까 봐 연합 함대에 끼는 것을 꺼린다. 수에즈 운하가 막혀 타격을 입은 이집트조차 미국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그만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중동에서 미국의 외교적 입지가 좁아진 것이다.

미국은 하마스의 10월 7일 기습 직후 이스라엘에 무기를 지원하는 등 이스라엘의 대량학살을 지원해 왔다.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을 분쇄해 자국의 중동 패권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다.

바이든 정부는 항공모함 2척을 동지중해로 보내고, 시리아와 이라크 내 친이란 무장 세력을 잇달아 공격하는 등 군사 개입을 하고 있다. 이런 맥락 속에서 홍해에서도 미군과 친이란 후티 간의 갈등이 커져 왔다.

후티 정부는 다국적 연합 함대 결성이 “가자지구와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공격의 일환”이라고 비난했다. 그리고 자신들이 공격당하면 즉시 반격하겠다고 경고했다.

바이든 정부는 홍해로 확대되는 것을 피하고자 한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더 광범한 지역으로 확대되면 중동이 더한층 불안정해지고 이는 미국 전략의 대중국 집중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란이 후티와 긴밀하다는 것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미국은 이 지역 무장 단체들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에 끼여 들지 않게 해 달라고 이란에 요청했다.

그래서 아직까지 미군은 후티의 미사일과 드론을 요격하지만 그 공격 원점, 즉 예멘 영토 내 후티 군사 기지를 공격하지는 않는다.

물론 서방의 해군력이 홍해 같은 좁은 바다에 결집하게 되면, 긴장이 커지고 변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우발적 사고가 심각한 충돌로 이어질지 모른다. 또한 홍해 물류 위기가 장기화되면 미국도 대응 수위를 더 높일지를 놓고 고민할 수 있다.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패배를 거치며 미국은 중동을 통제하는 데 애를 먹고 있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은 미국의 이런 처지가 더 확실해 드러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홍해 위기는 미국 제국주의의 또 다른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청해부대 파견 저율질하는 윤석열 정부

바이든 정부는 더 많은 국가들에 연합 함대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12월 19일 미 국방장관 오스틴은 43개국에 참여하는 화상 회의를 열어 “번영 수호자 작전”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이 회의에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 정책실장 허태근 당시 준장이 참석했고, 그 자리에서 미국은 한국에도 연합 함대 참여를 요청했다.

같은 날 윤석열 정부는 미국, 나토(NATO), 일본, 호주 등과 함께 예멘 후티 정부를 비난하는 공동 성명을 함께 내놓아, 서방의 홍해 군사 개입을 외교적으로 지지해 줬다.

그리고 12월 21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 국익과 국가 위상 등을 고려해 [다국적 연합 함대에] 어떤 지원이나 기여 방안이 적절할지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청해부대의 홍해 파견을 검토 중임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한국의 청해부대(구축함 양민준함)는 이미 아덴만에 소말리아 해적 소탕을 명분으로 파병돼 있다. 윤석열 정부가 미국의 요청에 응하려면 청해부대의 임무를 확대하거나 변경해야 된다.

중동 정권들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번영 수호자 작전”에 청해부대를 보낼지는 불확실하다. 그럼에도 어떤 형태로든 미국의 홍해 작전을 지원할 공산은 크다.

그것은 인도-태평양의 불안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

wspaper.org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 학교에서의 팔레스타인 연대 활동
- ★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시행
- ★ 국회의 때늦은 낙태권 개정 논의, 그조차 반대하는 정부
- ★ 김건희 특검법 정당하다

이스라엘의 가자 인종학살

역사상 최악의 공동처벌(연대책임 지우기)

김인식

팔레스타인 중앙통계청(PCBS)은 10월 7일 개전 이래 12월 23일까지 가자지구에서 2만 561명이 죽었다고 집계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에서 역사상 가장 강도 높은 연대책임 지우기(공동 처벌) 작전을 펼치고 있다.

병원과 구급차를 폭격하고 건물을 파괴하며 물·식량·전기를 사실상 끊었다. 이를 통해 무장 저항 세력을 굴복시키고 민간인의 동조 의지를 꺾고자 한다.

연대책임 지우기 전략이 절정에 달했던 제2차세계대전과 비교해 봐도 가자지구의 피해는 어마어마하다.

연합군은 1942~1945년 함부르크·다름슈타트·드레스덴 등 독일 도시 51곳을 폭격해 그 도시들의 40~50퍼센트를 파괴했다.

그런데 가자지구에서는 단 두 달 만에 건물의 33퍼센트가 파괴됐다.

이스라엘군이 사용한 폭탄과 대포는 대부분 미국제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확실하게 편들지 않으면 댈 수 없는 화력이다.

〈뉴욕 타임스〉(12월 22일 자)는 이스라엘군이 가자 주민들을 남부 ‘안전 지대’로 소개한 뒤 2000파운드(907킬로그램) 무게의 초대형 폭탄으로 208차례 폭격했다고 폭로했다.

2000파운드면 아파트를 무너뜨릴 수 있고 반경 20미터 이내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미국은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에 MK-84 초대형 폭탄을 5000발 이상 공급했다.

그런 초대형 폭탄을 인구 밀집 지역인 가자 남부에서 마음껏 사용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스라엘이 인종 말살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다는 뜻이다.

230만 가자 주민을 이집트 시나이 사막으로 내쫓으려던 계획이 여의치 않자, 죽여서 없애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또다시 휴전을 반대했다. 그래서 12월 22일 유엔 안보리는 ‘즉각적인 적대 행위 중단’이라는 문구가 빠진 구호 지원 결의안을 채택했다.

살인자가 총 쏘는 상황에서 그저 부상자와 기근자를 구호하라는 결의안이다. 그래서 “가자지구 민간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국경없는의사

회)는 결의안이다.

이스라엘의 인종 청소에 대한 분노가 세계적으로 확산되자, 주요 서방 정부들조차 미국과 다른 입장을 취해야 했다.

12월 12일 유엔 총회에서 G7(서방 주요 7개국) 중 미국만이 ‘즉각적인 인도적 휴전’ 결의안(법적 구속력도 없다)에 반대했다. 프랑스·일본·캐나다가 찬성했고, 영국·독일·이탈리아는 기권했다.

부득이하게 바이든은 이스라엘에 경고했다. “[가자지구에 대한] 무차별적 폭격으로 이스라엘은 지지를 잃기 시작했다.” 전 세계인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에 하나마나 한 말이었다.

저강도 전쟁

미국과 이스라엘의 입장 차이는 전략(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인 인종 청소)의 차이가 아니라 전술(인종 청소 수단과 방식)의 차이일 뿐이다.

미국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은 12월 18일 이스라엘을 방문해 이렇게 말했다. “이스라엘이 가자에서 벌이고 있는 전쟁은 정당방위이다.”

식민주의가 피지배 인민을 향해 자행하는 전쟁이나 폭력은 “정당방위”일 수 없다.

미국은 심지어 이스라엘이 전쟁을 끝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바이든은 12월 23일 네타냐후와 통화하면서 “휴전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은 ‘저강도 전쟁’을 이스라엘에 권고한다.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이 확전으로 이어질까 봐 우려해서다(본지에 실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유발한 홍해 위기: 청해부대 파견 가능성 경계해야’를 보시오).

미국 국무장관 앤터니 블링컨은 12월 20일 이렇게 말했다. “이스라엘에는 하마스를 제거할 의무와 가자지구 민간인 희생을 최소화할 의무가 병존한다.”

무차별 폭격과 대규모 지상전에서 하마스만 정밀 타격하는(불가능한) 전술로 전환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라크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봤듯이, ‘정밀 타격’은 반드시 민간인 대량 사상(제국주의자들은 냉혈한답게 이를 두고 “부수적 피해”라고 부른다)을 수반한다.

미국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스라엘을 옹호하기 때문에 네타냐후는 기고만장하다. “전쟁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전쟁을 계속하겠다.”



무차별 폭격 가자지구에서 단 두 달 만에 건물의 33퍼센트가 파괴됐다

“공동처벌로 하마스를 궤멸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무자비한 폭격과 대량 학살은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의 저항을 굴복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그 때문에 서방 엘리트들의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편집국은 12월 17일 네타냐후를 공개 비판했다.

“몹시 고통스러운 때에 이스라엘은 적어도 그런 현실을 인식하고 기꺼이 두 국가 방안을 지지하자고 주장하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네타냐후는 그런 지도자였던 적이 없다.”

심지어 영국의 전 국방장관 벤 월러스 같은 매파조차 이렇게 경고했다. “이스라엘 정부가 가자에서 드러내는 살벌한 분노가 그 나라의 도덕적·법적 권위를 위협하고 또 다른 50년 전쟁을 부채질한다.”(〈가디언〉12월 18일 자)

미국 시카고대학교 교수 로버트 페이프는 “공동 처벌(연대책임 지우기)로 하마스를 궤멸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썼다(《포린 어페어스》12월 6일 자).

“순전히 전략적인 관점에서 판단해

볼 때도, 이스라엘의 방식은 실패할 운명이다. 사실 이미 실패하고 있다. 민간인을 대규모로 [공동] 처벌하는 것은 가자지구 주민들로 하여금 하마스 지지를 철회하도록 납득시키지 못한다.

“역사는 민간인 거주지에 대한 대규모 폭격이 목표를 이룬 적이 거의 없음을 보여 준다.

복수

“이스라엘이 학살하는 것보다 더 많은 테러리스트[하마스 전사]를 양산해 내고 있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 왜냐하면 죽은 민간인들마다 복수를 위해 하마스에 가입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가족과 친구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공동 처벌(연대책임 지우기)은 팔레스타인인들 사이에서 분노만 고조시켰을 뿐이다. 군사 작전은 표면상 타겟으로 삼은 조직을 해체시키지 못했다. 50일 넘은 전쟁은 이스라엘이 가자를 무너뜨릴 수 있을지언정 하마스를 파

▶ 5면으로 이어짐



사진 출처: nabuls_news

서안지구에서 폭격으로 파괴된 집에 내걸린 하마스, 팔레스타인 깃발

▶ 4면에서 이어짐

괴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사실 지금 하마스는 전보다 더 강해졌을 것이다.

“하마스는 이스라엘 군대에 없는 강점이 있다. 하마스는 쉽게 전투를 포기하고 민간인들 속으로 스며들어 살아가다가 더 유리한 조건에서 전투를 재개할 수 있다. 이것도 이스라엘군의 대규모 지상전이 실패할 운명인 까닭이다.

“일반 통념과 달리, 대다수 테러리스트들은 종교나 이데올로기 때문에 그런 사명을 택한 게 아니다. 비록 일부는 분명 그랬지만 말이다. 오히려 테러리스트

가 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빼앗긴 땅 때문에 그 활동을 했다.”

팔레스타인정책조사연구소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이런 견해가 설득력 있음을 뒷받침한다.

그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0퍼센트는 무장 투쟁이 이스라엘의 점령을 종식시키기 위한 최선의 수단이라고 답했다.

또, 서안지구에서는 44퍼센트가, 가자지구에서는 42퍼센트가 하마스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50퍼센트를 넘지 못했지만, 9월 조사보다 각각 12퍼센트포인트, 4퍼센트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반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대한 불신은 전쟁 이후 더 커졌다. 88퍼센트가 자치정부 수반인 마무드 아바스의 퇴진을 원했다. 서안지구에서는 92퍼센트가 나왔다. 바이든은 이토록 불신받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가자지구 전후 통치를 맡기려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가자지구에서도 미국의 제국주의는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난항

바이든 정부의 인질 교환 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다. 이스라엘군의 자국민 인질 오인 사살 이후 반발이 커지자, 바이든 정부는 인질 교환을 위한 일시적 휴전을 이스라엘에 요구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 윌리엄 번스, 이스라엘의 모사드, 카타르가 협상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하마스는 인질 석방 대상을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이스라엘군이 미리 설정된 선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협상 우위를 확보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한편, 이집트가 이스라엘에 3단계 중재안을 제안한 직후 하마스의 가자지구 지도자 야히야 신와르는 항전 의지를 분명히 하는 편지를 해외 지도부에 보냈다. “[알 카삼 여단은] 이스라엘군을 격파하고 있고… 점령군의 조건에 굴복하지 않겠다.”(《알자지라》12월 25일 자).

신와르는 같은 편지에서 가자 지상전 개시 이래 이스라엘군 사상자가 5000명이고, 그중 1660명이 전사했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 한국외교부

조희연 서울 교육감, 주한 이스라엘 대사에게 감사장이라니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2월 20일 주한 이스라엘 대사에게 국제 교류 유공 감사장을 수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부터 다른 나라 학생들과 함께 온라인 수업을 하는 ‘공동 수업’ 행사를 진행 중인데, 이스라엘이 협조했다는 이유로 감사장을 수여한 듯하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인종 학살로 국제적 지탄의 대상이 돼 있는 것을 모르나?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군은 지금까지만도 팔레스타인인을 최소 2만여 명 살해했는데, 어린이 사망자가 무려 8000명이 넘는다. 교육감 맞나?

현재 가자지구는 극심한 인도적 위기에 처해 있다. 이스라엘은 병원·학교·피난처 가릴 것 없이 무자비하게 폭격을 퍼부으며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인종 청소’를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한 항의로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연대가 국제적으로 전례 없는 규모로 이뤄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스라엘을 규탄하고, 팔레스타인인과 연대하는 행동이 두 달 넘게 지속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다양한 종류의 보이콧을 벌일 것을 요구하는 국제 운동인 BDS(불매, 투자 철회, 제재) 운동도 힘을 얻고 있다. 그 일환으로 한국의 대학생들도 주한이스라엘 대사관 추방 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도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은 이스라엘 국가와 시온주의에 대한 비판을 “반유대주의”로 호도하며, 자국의 가자 침공과 인종 학살을 옹호하는 프로파간다를 적극 퍼뜨리고 있다.

이스라엘 국가가 국제적으로 고립돼야 마땅한 때, 진보 교육감을 자처하는 조희연 교육감이 주한 이스라엘 대사에게 감사장을 수여한 것은 진보적 감수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무감각한 짓이다. 조희연 교육감이 강조해 온 학생 인권 교육에는 부합할까?

이현주

15차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행진

이스라엘은 인종 학살 즉각 멈춰라 팔레스타인에 연대를

일시: 12월 30일(토) 오후 2시
장소: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 (서울 중구 무교로 32 효령빌딩)
주최: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사람들
※집회 후 행진

현 팔레스타인 저항의 쟁점들을 다룬 노동자연대 TV 영상 모음

온라인 토론회 영상,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의 열기를 느낄 수 있는 현장 영상들을 만나 보세요!

bit.ly/477esMy

팔레스타인의 저항을 아는 데 도움이 될 책

강탈국가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강탈의 역사
존 로즈 지음, 이정구 옮김, 책갈피, 184쪽, 9,000원

팔레스타인의 저항 - 이스라엘과 제국주의에 맞서 해방은 어떻게 가능한가
필립 마플릿 지음, 이정구 옮김, 책갈피, 440쪽, 20,000원

팔레스타인 비극사 - 1948, 이스라엘의 탄생과 종족청소
일란 파페 지음, 유강은 옮김, 열린책들, 568쪽, 25,000원 (절판)

팔레스타인 100년 전쟁 - 정착민 식민주의와 저항의 역사, 1917-2017
라시드 할라디 지음, 유강은 옮김, 열린책들, 448쪽, 25,000원

프랑스 혁명적 좌파 활동가 인터뷰

이민법 개악에 항의하는 시위가 분출하다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분노와 충격의 물결이 프랑스 전역에서 거대하게 일렁이고 있다. 이주민을 억압하는 새로운 법이 파시스트들의 지원으로 통과됐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12월 21일 목요일 저녁에 렌, 상베리, 몽펠리에와 다른 10개 도시의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12월 22일 금요일 오후와 저녁에도 시위들이 파리, 렌, 마르세유, 리옹, 툴루즈, 브레스트, 리모주, 바욘, 포, 그리고 다른 도시와 마을들에서 계획되고 있다.

학생들은 몇몇 대학을 봉쇄하고 기층의 노동자 단체들은 파업을 촉구하고 있다.

12월 넷째 주에 신자유주의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이 이끄는 정부는 새로운 이민법의 제정을 강행했다. 내무장관 제랄드 다르마냉이 법 통과를 주관했다.

처음에는 국회에서 좌파와, 마린 르펜의 파시스트 정당 국민연합(RN)을 포함한 우파의 상당수가 다르마냉의 이민법에 반대표를 던졌다. 그러자 마크롱은 더 우경화한 법을 내놓아 결국 전통적인 보수주의자들의 지지와 국민연합의 표를 얻었다.

파리에서 활동하는 사회주의자이자 인종차별 반대 활동가인 드니 고다르가 찰리 김버에게 이 운동의 동력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분노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사진 출처: Marianne Cabaret (X, 옛 트위터)

“어느 학생도 외국인이 아니다, 우리 나라는 연대라고 부른다” 파업에 나선 고등학교 노동자들

Q 왜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나요?

우리는 마크롱의 당과 보수당, 그리고 파시스트들이 모두 함께 이민법에 찬성 투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번 주 의회 앞 시위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했습니다. 마크롱은 자신이 파시즘의 진출을 막는 장벽이자 수문장이라고 선언하며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오히려 두 가지 방식으로 파시스트 단체에게 대로를 열어 주었습니다.

첫째, 마크롱 정부는 표결에서 국민연합과 손잡을 수 있도록 의회 연합을 꾸렸습니다. 이것은 마크롱 정부가 파시스트 단체의 정당성을 최상층부에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마크롱 정부는 “민족 선호” 개념을 수용했습니다. 이 개념은, 프랑스 국가가 프랑스인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이주민(모든 ‘합법’ 이주민까지도)이나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달리 대우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공개적이고 구조적인 불평등입니다.

이러한 위계 구조는 파시스트 국민전선과 그 후신인 국민연합이 수십 년 동안 바라 온 꿈이었습니다. 이제 파시스트들은 이 꿈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르펜이 이 법을 두고 그녀의 당이 “이념적 승리”를 거뒀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질적인 변화입니다. 기존의 인종차별적 법률에 인종차별적 규제 하나가 추가된 수준이 아닙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심지어 총리조차 표결 다음 날 TV에서 법안의 일부

는 헌법에 어긋날 수 있으며 삭제돼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Q 저항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의 구호는 현재 상황이 비상, 비상, 비상이라는 것입니다.

12월 18일 월요일 프랑스의 60개 도시에서 사람들이 항의에 나섰습니다. 파리에서는 당국이 행진을 금지했지만 사람들은 행진했습니다. 다르마냉이 다르마냉에 반대하는 시위를 금지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사람들을 더 분노하게 했고, 운동은 집회 금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월요일에 파리에서 열린 집회에 1만 5000명 이상이 참가했습니다. 우리가 건설한 이 운동이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좌파와 우파가 모두 법에 반대하는 것을 이용해 이 법을 막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입니다.

마크롱은 언제나 더 나쁜 법을 들고 돌아올 작자였습니다.

사회주의자이자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노동조합이 이 인종차별 법을 파괴할 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파업을 선언해야 했습니다.

일부 노조 지도자들이 이 법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합원들을 파업에 동원해야 합니다. 몇 군데의 작업장에서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이것이 노동자들이 인종차별 반대 요구를 명시적으로 걸고 파업을 조직한 첫 번

째 사례라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좌파도 사람들을 시위에 별로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나쁜 인종차별 법이 통과된 것에 사람들은 너무 경악했고 그래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미 몇몇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건물을 봉쇄하고 있습니다. 파리의 일부 학교는 학생들에 의해 봉쇄됐습니다. 파리에서 가장 잘 알려진 도서관에서는 직원들이 ‘이 도서관에는 체류 허가증 없이도 입장할 수 있습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자생적으로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동총동맹(CGT)의 지도자 소피 비네는 “시민 불복종과 저항 행동의 도약”을 촉구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이런 호소를 더 이전에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시위를 조직하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올해 초 연금 문제를 두고 투쟁했던 노동자들과, 인종차별·경찰 폭력에 반발해 시위했던 청년들 사이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그런 종류의 연대가 지금 당장 우리에게 꼭 필요한 연대입니다.

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회 최상층부에서도 내분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지방 정부 지도자들은 이번 법의 특정 조항은 따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마크롱의 정당 안에 “좌파”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그의 당에서 27명의 의원이 법에 반대 투표했고, 32명이 기권했습니다. 마크롱을 지지하는 의원들의 4분의 1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장관 한 명이 사퇴했고, 또 다른 장관도 사임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우리는 시위하고 파업에 나서라는 압력을 높일 것이고, 그리고 1월 6일에는 전국적으로 대중행동의 날이 있을 것입니다.

영국에서의 인종차별에 맞서는 당신들의 투쟁에도 연대합니다. 유럽 전역에서 우리는 싸워야 하며 분열해서는 안 됩니다.

Q 새로운 법이 무엇을 강제하나요?

이것은 이미 1년여 전부터 의회에서 논의되던 법입니다. 처음에 발의됐을 때 이미 그 법은 매우 인종차별적이었는데, 이주민뿐 아니라 모든 외국인이 불량배이거나 범죄자라고 전제하고 있었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이주민과 외국인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이들을 억압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은, 국가가 사람들을 축출하고 강제 추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단호함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설령 적법한 시민권 지위를 갖고 있더라도 말입니다.

▶ 7면으로 이어짐

팔레스타인인 2만여 명 죽었는데도 미국은 유엔 결의안 난도질

12월 20일 수요일 유엔 안보리에서 표결할 예정인[이 기사는 12월 19일에 쓰였다] 가자지구 “휴전” 결의안은, 미국 정부와 그 동맹국들의 구미에 맞게끔 실질적 내용이 체계적으로 삭제됐다.

아랍 정권들은 바이든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만한 내용으로 결의안을 만들려 온갖 애를 썼다. 미국은 10월 18일 “인도적 전투 중지” 촉구안에도, 12월 9일 인도적 즉각 휴전안에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애초 월요일에 표결하려다가 화요일로 연기됐다. 하지만 미국은 “적대 행위 중지”라는 표현에 찬성할 수 없고, “적대 행위 유예” 촉구라는 표현은 수용할 수도 있다고 했다.[결국 12월 22일 “적대 행위 중지”라는 표현이 빠진 구호 지원 결의안이 통과됐다.]

다시 말해 미국은 이스라엘이 반제국주의 항쟁이라는 화약 더미에 불을 붙일까 두려워하는 것과는 별개로, 며칠을 넘는 휴전에는 반대하겠다는 것이다. 희생자들에게 약간의 물과 식량이 허용되도록 교전이 일시 중지될 수 있지만, 뒤이어 또다시 전투가 재개될 것이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유엔 결의안은 — 심지어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하는 안보리 결의안도 — 강대국들과 이스라엘에게 무시당하기 일쑤다.

유엔 논의가 시작될 무렵, 이스라엘에 의한 팔레스타인인 사망자 수는 공식 집계로 2만 명을 넘어서려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사망자 수는 이미 2만 명을 훨씬 넘었다.

19일 화요일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스라엘군이 10월 7일 이후 팔레스타인인을 최소 1만 9453명 살해하고 5만 2286명을 다치게 했다고 발표했다. 보건부는 그밖에도 8000명에 이르는 팔레스타인인들이 실종 상태라고 했는데,



인종 학살자 친구지간 이스라엘 극우 नेता후와 미국 제국주의자 바이든

실종자 다수는 자기 집, 학교, 병원이 파괴된 잔해 아래 깔려 있다.

19일 화요일 안보리에 상정된 결의안에는 “지속 가능한 휴전”이라는 표현이 들어갈 예정이었다. 이는 영국 외무장관 데이비드 캐머런과 독일 외무장관 아날레나 베어보크가 영국 <선데이 타임스>에 기고한 글에 나온 표현이다.

범죄

그러나 그 글은 이스라엘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 당장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면서 그것이 어떻게든 항구적 휴전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해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10월 7일 이전에도 하마스가 실질적인 평화 파트너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웠다. 10월 7일 이후 그런 환상이 들어설 여지는 전혀 없다. 하마스가 가자지구를 계속 장악하게 두는 것은 두 국가 해법으로 가는 길에 놓인 항구적인 장애가 될 것이다.”

만약 미국과 영국이 정말로 휴전을 원한다면, 무기 공급과 막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해 이스라엘이 학살하지 못하게 하면 될 일이다. 그렇기는커녕 미국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은 18일 이스라엘을 방문해 자신의 동맹 이스라엘을 계속 무장시켜 주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는 핵심 군수 물자, 전술 차량, 대공 방어 체계 등 이스라엘의 국가 방위

에 필요한 장비를 계속 지원할 것이다.”

오스틴은 영국 등 10개국이 속한 다국적군을 구성해, 예멘 후티 정부가 홍해에서 이스라엘과 연계된 유조선·화물선 등의 선박을 공격하는 것에 군사적으로 맞서 싸울 것이라고도 발표했다.

이스라엘의 술한 잔혹 행위와 이에 대한 서방의 지원에도 팔레스타인 저항 세력은 계속 반격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10주 전에 가자지구를 침공했는데도 아직 가자지구 남부는 고사하고 북부에서도 하마스를 제거하지 못했다. 대다수 하마스 지도자들은 잡히지 않고 계속 활동하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가 가자지구에서 자국민질을 빼내기는커녕 사살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내부에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12월 15일 하마스의 군사 대변인 아부 오베이다는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알아크사 홍수” 전투[10월 7일 공격] 이후 70일이 지난 지금도 우리 팔레스타인인들은 전투를 벌이고 있다.

“우리의 용맹한 전사들은 중무장한 저들의 병력에 맞서 싸우고 있다. 저들은 살상 무기와 탄환으로 중무장하고 전투기·군함·장갑차의 지원을 받으며, 미국 정부가 주도하는 억압적이고 침략적인 세력들의 비호를 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전사들은 빛을 품고 긍지를 가지고 이 역사적 전투에서 영웅적으로 투쟁하고 있다. 우리 전사들이 적의 장갑차를 어떻게 파괴하고 불사르는지를 전 세계가 보고 있다.”

이스라엘의 범죄가 늘어가는 지금, 팔레스타인인들과의 연대를 계속 건설하는 것이 중요하다.

찰리 김버

출처 Charlie Kimber, ‘US guts UN resolution as Palestinian death-toll exceeds 20,000’ (2023. 12. 19) / 번역 김준호

▶ 6면에서 이어짐

예를 들어, 이주민이 정부가 허가하지 않은 시위에 참여하거나 그 밖에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추방될 수 있습니다. 이제 “공화국 가치”에 반대한다는 것만으로도 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슬림을 향해 겨냥되는 무기입니다. 이번 주에 통과된 법은 외국인의 자녀가 프랑스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더 이상 자동으로 프랑스 시민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공질서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간주되는 난민 신청자는 선제적으로 구금될 수 있습니다.

비유럽연합 국가 출신의 노동자가 어린이 돌봄과 같은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프랑스에서 30개월 이상 거주한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고용돼 있지 않은 외국인이 혜택을 받으려면 5년을 기다

려야 합니다.

거주 또는 노동 허가를 받지 못한 비유럽연합 국가 출신이더라도 음식점, 건설업 및 농업과 같이 구인난을 겪는 부문에서 일하면 거주·노동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최소 3년 동안 프랑스에 거주하고, 지난 2년 동안 최소 12개월을 일했어야 합니다.

프랑스 당국은 신청자들이 “프랑스 사회에 동화됐는지”, 이들이 “공화국 가치를 존중하는지”를 판단할 것입니다. 말썽꾼은 신청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정리 찰리 김버

출처 An interview with Denis Godard in France, ‘Uproar in France after government passes new racist law. Interview from Paris’ (2023. 12. 22) / 번역 김샘

서안지구에서 시온주의 정착자들과 이스라엘 군대가 함께 자행한 전쟁

소피 스콰이어

미국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마치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가자지구 통제권을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소피 스콰이어는 자치정부가 명목상 통치하는 지역인 서안지구를 보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이스라엘에 부역해 오며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수치로 여겨지고 있다고 폭로한다.

어느 토요일 아침 압드 알-자와드 칼릴과 그의 아들 니자르는 서안지구 북쪽 아스-사위야 마을 근처에 있는, 가족이 운영하는 올리브 과수원에서 나무를 가지치기하고 땀을 모아오기로 했다. 일을 하다가 이들 부자는 언덕 꼭대기에서 자신들에게 오고 있는 20명의 무리를 발견했다. 그리고 이들이 무기와 쇠파이프를 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스라엘 정착자들이었다.

정착자들은 이들 부자에게 욕을 퍼붓고 돌을 던지며 다가왔다. 고령인 압드 알-자와드는 뛰어서 도망갈 수 없었다. 아들 니자르가 대신 돌맹이를 맞으려고 아버지 앞을 가로막고 섰다. 안타깝게도 돌 하나가 아버지 압드 알-자와드에게 명중했고 그는 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렸다.

이런 공격은 서안지구에서 드문 일이 아니다. 서안지구의 이스라엘 정착자들이 팔레스타인인들을 대상으로 벌이는 폭력·살인·위협 행위는 모두 시온주의 프로젝트의 일부다. 이런 행동의 목표는 최대한 많은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사는 아랍인 숫자를 줄이는 것이다.

정착자들은 이스라엘이 점령한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 지역에 거주하기로 스스로 결정한 이스라엘 시민들이다. 주류 언론은 흔히 이들을 종교적 광신도들로

이뤄진 비주류 집단으로 묘사한다. 그러나 정착자들이 벌이는 서안지구 침략과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잔혹 행위를 후원하고 지원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국가다.

서안지구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의해 운영되지만, 이 정부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스라엘에 협조한다. 평범한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이는 폭력과 토지 강탈을 의미할 뿐이다. 이것이 바로 두 국가 방안이라는 거짓된 환상의 현실이다.

서안지구에서 토지를 빼앗는 것은 50년 넘게 시온주의 프로젝트가 내세운 정치 목표다. 이스라엘인들은 1967년 '6일 전쟁' 직후 정착촌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군사 점령하에 놓였다.

2005년까지는 가자지구에도 이스라엘 정착촌이 있었는데, 이후 이스라엘 정부가 이곳에서 정착촌을 철수시켰다. 이스라엘 군대의 가자지구 철수는 그곳의 정착자들이 서안지구로 정착하도록 부추기는 계기가 됐다. 각종 유엔 결의안은 1967년 이후 군사 점령과 정착촌 건설이 국제법상 불법임을 거듭 명시했다.

아니나다를까 미국의 후원을 받는 이스라엘은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이스라엘은 텔아비브나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인과 비교해 정착촌에 사는 이스라엘인에게는 한 명당 약 두 배나 되는 예산을 쓴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비영리 자선 단체들도 정착자들을 후원한다. 이스라엘 신문 <하아레츠>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미국 자선 단체들은 이스라엘 정착자 조직에 2억 2000만 달러를 보냈고, 많은 경우 면세를 받았다. 유엔은 이스라엘 정착민 수가 2012년 52만 명에서 2022년 70만 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정착자들은 더욱 이스라엘 국가의 일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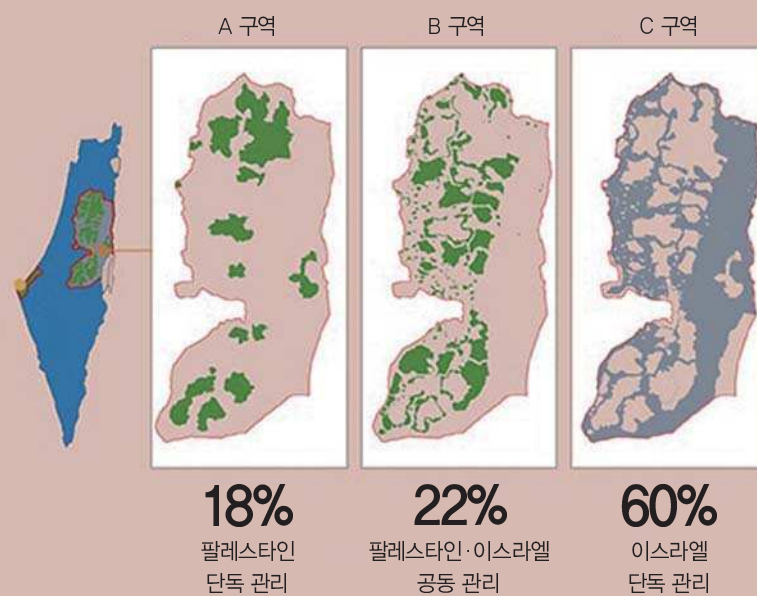
이스라엘 지배자들은 10월 7일 하마스 공격 이후 정착자들이 더 많은 팔레스타인인을 살해하고, 위협하고, 쫓아내도록 더한층 부추겼다. 그러나 서안지구 활동가 하메드는 이스라엘 국가가 단순히 정착자들에게 무기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고 <소셜리스트 워커>에 전했다. 하메드는 정착자들이 갈수록 이스라엘 국가의 일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때 서안지구에 주둔하던 많은 병력이 가자지구에 배치되면서 이스라엘 군대는 정착자들 사이에서 병력을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경찰과 군대가 정착자들로 충원되고 있습니다. 이는 어느 누구도 정착자들의 지배에 도전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저는 국제 기구에서 일합니다. 전에는 헤브론 언덕에 일주일에 3번씩 차를 타고 올라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에는 3번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너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제2차 오슬로 협정에 따른 서안지구 분할



팔레스타인인들이 사는 예루살렘 셰이크 자라 지구에서 행진을 벌이는 이스라엘 정착자들

“서안지구 팔레스타인인들은 아무 권리도 누리지 못합니다”

1995년 제2차 오슬로 협정에 따라 서안지구는 A, B, C 구역으로 분할됐다. A구역은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팔레스타인 도시 라말라, 베들레헴, 나블루스, 제닌, 툴카람이 이 구역 안에 있다.

B구역은 서안지구의 약 22퍼센트를 차지한다. A구역과 B구역 모두에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서류상 통치권을 얼마간 갖는다. 그러나 이 두 구역에 사는 팔레스타인인들은 자유롭게 못한다. 여전히 그들은 이동하려면 검문소를 통과해야 하고 이스라엘 국가와 정착자들의 공격을 피할 수 없다.

서안지구 영토의 60퍼센트를 차

지하는 C구역에서는 이스라엘이 완전한 통제권을 행사한다. C구역에는 대략 30만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살고 있는데, 이들은 자신들을 끊임 없이 쫓아내려는 40만 명의 정착자들에 둘러싸여 있다.

에후드 크리니스는 팔레스타인인들과 이스라엘인 자원봉사자들로 이뤄진 작은 단체 ‘빌리지그룹’의 회원이다. 이 단체는 살림과 데이크 엘 하타브라는 두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도와주고 지원한다. 그 마을들의 일부는 C구역에 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 9면으로 이어짐

정착자 정당들이 지금 이스라엘 정치의 중심에 있다

자신의 목표를 공공연히 드러내는 정착자 운동은 지난 몇 년 사이 이스라엘 정부 안에서 급속히 세력을 키웠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연립정부는 여러 우익 정당과 극우 정당으로 이뤄졌고 이들 중 다수는 토지 강탈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 안에 존재하는 정착자 운동의 대표 인물 중 하나가 현 재무 장관인 베잘렐 스모트리치다. 그는 [이스라엘의 시리아 점령지] 골란고원에 있는 이스라엘 정착촌 하스핀에서 태어났다. 2017년 스모트리치는 이스라엘 국가가 “정착촌을 통한 승리”를 추진해야 한다며 그 방안을 상세하게 제시했다.

지난해 2월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스모트리치에게 서안지구에 있는 모든 시온주의 정착촌을 감독하는 책임을 맡겼다. 그러나 정착촌에 대한 지원이 느는 것은 몇몇 인사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이스라엘 연립 정부는 정착자 지지 성향을 공공연히 드러내는 정당들의 지지로 유지되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3월 예산 중 6800만 달러를 극우 정당 오츠마 예후디트에 주며 서안지구의 네게브와 갈릴리 지역에 정착촌을 건설하도록 했다.

시온주의 국가는 정착촌 건설과 관련해 다른 서방 강대국의 반발에 직면



이스라엘 정착자 민병대가 서안지구 팔레스타인인들을 위협하는 글과 함께 인터넷에 올린 사진

하기도 했다. 미국은 때때로 미온적인 반대를 표하기도 했다.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 베단트 파텔은 일부 특정한 이스라엘 법률이 백악관이 보기에 “매우 거슬린다”고 말했다. 2023년 3월 서안지구 북부에서 불법 정착촌 건설을 재개할 수 있게 한 법률을 두고 한 말이었다. 때때로 이스라엘 국가는 자신이 정착자 운동 지원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숨기려 했다. 에후드는 이스라엘이 정착촌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이 지난 몇 년 사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이스라엘 정부는 모든 정착촌을 승인했습니다.

“그러다 1990년대에 들어서자 이스라엘 국가가 일부 정착촌은 법적으로 인정하지는 않겠지만 여전히 정착자들

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세 번째 흐름으로 이스라엘 정부가 정착촌을 목장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정착촌은 그저 목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애초에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에후드는 정착자 운동이 20~30년 전에는 주변적이었지만, 이제 더는 주변부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오늘날 정착자들은 정치적으로 매우 강력합니다. 저는 이들이 이스라엘 사회 일부의 강력한 지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정착자가 동일한 견해를 지닌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이 더 극단적이고 과격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8면에서 이어짐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은 어떤 권리도 누리지 못합니다. 이들은 점령하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C구역에서는 ‘조용한 퇴거’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착자들과 군대는 이 지역에 사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삶을 극도로 힘들게 만들어서 팔레스타인인들이 A구역이나 B구역으로 떠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에후드는 C구역에 사는 아랍인을 모두 내쫓으려는 이스라엘 국가의 잔인한 계획을 직접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국가는 계획적으로 팔레스타인인들을 차근차근 조직적인 방식

으로 쫓아내려 합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을 고립시켜 그들이 받을 갈 수 없게 만들고, 그들이 기르는 가축이 풀을 뜯지 못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

“이 계획들은 10월 7일 이전에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훨씬 더 절박합니다. 우리와 연락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은 정착자들이 길을 막고 있어 자신이 사는 공동체 바깥으로 거의 나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이들의 집에 쳐들어와 돈을 훔

치고 연장을 망가뜨리고 모든 것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문제를 그저 소수의 극단적 정착자들의 소행으로 치부하려 한다고 에후드는 설명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일부 ‘폭력적’ 정착자들에게는 비자 발급을 금지하겠다고 말하며 이스라엘의 이런 주장을 뒷받침해 줬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모든 정착촌 건설의 배후에는 이스라엘 정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는 폭력을 정당화하고 정착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그런데도 국제사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저항은 계속된다

끔찍한 점령 아래 살아가면서도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은 언제나 저항했다. 하메드는 이렇게 말했다.

“많은 이들에게 10월 7일은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곳 서안지구에서는 저항 세력에 대한 지지가 높습니다. 그런 지지가 언제나 하마스라는 특정 단체에 대한 지지는 아니지만 반격에 나서는 모든 이들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배신자로 여깁니다. 하마스가 무너지면 자치정부가 가자지구를 다스리려고 대기 중이라고 사람들은 분노하고 있죠. 자치정부는 팔레스타인인의 유일한 합법적인 대표 세력을 자처하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되길 바라지 않습니다. 서안지구에서 사는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저항세력과 함께할 것입니다.”

연대

이스라엘 국가의 거세지는 탄압에도 아랑곳 않고 서안지구 도시들에서 가자의 저항 세력에 연대하는 대규모 항의 시위들이 벌어졌다. 하메드는 팔레스타인인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이스라엘 국가가 사용한 방법은 그 어느 것도 통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1996년 네타냐후가 정권을 잡았을 때 그는 자유시장 정책을 추진하고 이스라엘인들이 팔레스타인인들의 노동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하고 대학에 진학하고 자기 집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는 팔레스타인인들이 멋진 차를 가질 수 있지만, 단 한 순간도 고향으로 귀환할 권리를 누리거나 해방될 수는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서안지구의 일부 팔레스타인인들은 그런 삶이 더 나은 것이라 믿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네타냐후는 우리를 매수하거나 자결권 투쟁을 포기하도록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국제



도널드 트럼프는 거듭되는 사법 공격에도 내년 대선 레이스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트럼프는 자신에 대한 기소를 이용해 '아웃사이드' 이미지를 다시 내세우고 있다. 트럼프의 재부상은 중첩된 위기의 대가를 평범한 사람들에게 떠넘겨 온 미국 민주당과 바이든의 책임이 크다. 미국 노동조합 지도부와 개혁주의 좌파도 바이든을 옹호하며 민주당에 협조해, 트럼프가 다시 기회를 잡는 데 일조했다.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설령 트럼프가 패하거나, 만에 하나 트럼프 개인의 정치 이력이 끝난다 해도, 트럼프가 활력을 준 극우는 오래도록 활개칠 것이다.



새해 벽두부터 브라질에서 노동자당
 (PT) 대통령 룰라의 당선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극우가 쿠데타를 시도했다.
 연말에는 '아르헨티나판 트럼프' 하비
 에르 밀레이가 아르헨티나 대선에서
 승리했다.
 네덜란드 총선에서 극우 자유당이
 승리했고, 반(反)파시즘 운동으로 황
 금새벽당이 해산됐던 그리스에서도
 신나치 정당들이 국회에 진출했다.
 선거 승리 1주년을 자축한 이탈리아
 의 파시스트 총리 조르자 멜로니,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올해 지방선
 거에서 압승한 인도국민당(BJP) 나렌
 드라 모디 정부도 있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계속된 신자
 유주의 질서의 균열은 극우에게 기
 회가 됐고, 이제 세계 곳곳에서 그
 균열이 더 커지고 있다.
 극우를 분쇄할 힘은 중도와의 동맹이
 아니라 계급 투쟁에서 나올 것이다.



프랑스 마크롱 정부가 연금 수령 연령을 2년 늦추는 연금 개혁을 밀어붙이자, 노동자들이 여러 달 동안 수백만 명 규모의 시위와 파업을 벌였다. 1968년 항쟁 이래 최대 규모였다.

하지만 노조 지도자들은 가다스다 파업과 띄엄띄엄 열리는 집중 시위로 행동을 제한했다. 결국 운동은 마크롱의 개혁안을 저지하지 못했다.

얼마 후 경찰이 한 알제리계 청년을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소요가 번졌다. 프랑스의 뿌리 깊은 인종차별과 사회적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 준 사건이었다. 또, 많은 프랑스 좌파들이 국가의 공격에 맞서 그 시위를 방어하는 시험대를 통과하지 못했다.

한편, 마크롱은 연이은 대규모 저항으로 정치적 타격을 입었고, 이민법 개혁(6면을 보시오)에서 보듯 더한층 우경화하고 있다.



11월 중순 지구 기온이 산업
화 이전에 비해 2도 이상 일
시적으로 높아졌다. 과학자
들이 경고하던 재앙적 임계
점에 더 가까이 다가간 것이
다.

하지만 각국 지도자들의 솔한
기후 대책 약속들은 이윤 논
리 때문에 속 빈 강정이 됐다.
오히려 각국 정부들은 화석
연료 체제 수호에 앞장서고 있
다.

이런 상황은 끔찍한 기후 재
난 심화로 이어지고 있다. 북
미와 하와이에서 초대형 산불
이 났고, 리비아에서는 역대급
홍수로 수많은 사상자가 나왔
다.

인류의 미래를 재앙으로 끌고
가는 이윤 체제에 맞선 대중
적·급진적 운동이 필요하다.



지난 8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를 강행했다. 일본 정부는 국내외의 반대를 무시하고 이 폐수를 흘려 보낸 것이다. 이 방류가 언제 끝날지, 향후 인간과 자연에 어떤 심대한 위협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

국제원자력기구, 바이든 정부는 이를 비호해 왔다. 윤석열 정부도 사실상 방류를 지지했다. 이들은 핵발전을 안정적인 전기 공급원이자 핵무기의 원료 공장이자 핵무기 기술의 보고로 여긴다. 그러다 평범한 사람들이 이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은 감수할 만한 일로 여기는 것이다.

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논리가 매우 야만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올해 전세 사기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정부가 제시한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만 1만 명을 넘었으니 전국적으로 수십만 명이 전세 사기로 고통받고 있을 것이다. 말 그대로 “사회적 재난”이다. 크나큰 고통 속에 상반기에만 피해자 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부는 마치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것처럼 생색내지만, 실상은 많은 피해자들이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상반기에 통과된 전세 사기 특별법도 다수 피해자를 배제하고,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이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생계비 위기는 올해도 계속됐다. 올해 물가는 3.6퍼센트 상승했는데, 지난해 5.1퍼센트 오른 데 이어 더한층 인상된 것이다. 올해 상반기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1.5퍼센트 하락했다. 올해 3분기에 하위 60퍼센트의 소득도 줄어들었다.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도 늘어났다. 올해 가계의 이자 부담은 역대 최대로, 4년 전보다 무려 50퍼센트 늘어났다. 서민들은 그야말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서민 지원은커녕, 부자 감세를 하고 긴축 정책을 추진했다.

지난 7월 서이초 교사가 과중한 업무와 학부모 민원 등의 스트레스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자, 이에 분노한 거대한 교사 운동이 터져 나왔다. 오늘날 교사들이 교권이 실추돼 교육이 불가능한 학교에서 가르치라는 부당한 요구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이 운동은 드러냈다. 매주 주말 폭염 속에서도 교사 수만 명이 집회를 개최했고, 9월 2일 집회에는 무려 20만 명이 참가했다. 교육부의 징계 협박이 있었지만 9월 4일 ‘공교육 멈춤’ 행동에는 15만 명이 참가했다. 결국 교육부는 징계 위협을 철회하며 한 발 물러서야 했다. 이 운동으로 ‘교권 보호 4법’ 개정 등 몇 가지 상징적 조치가 취해졌지만, 실질적인 개선은 아직 미미하다. 그러나 이 운동은 교사들뿐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 도사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높여 줬다.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양의 155밀리미터 포탄을 우회 지원했음이 폭로됐다. 한국이 지원한 포탄이 유럽 국가들이 제공한 것보다 더 많다는 점도 폭로됐다. 그동안 정부는 살상 무기는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거짓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서방을 지원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한국 자본주의의 이익을 도모하려 했다. 무기를 지원받은 우크라이나가 올해 시도한 공세는 실패로 끝났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우크라이나에서 제국주의 대리전이 장기화되면서 세계는 더 불안정해지고 있다. 한국의 무기 지원은 러시아의 반발을 사면서 한반도 평화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부터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건설노조를 주요 타깃으로 삼았다. 윤석열이 직접 건설노조를 “건폭”이라고 공격했다. 불안정한 고용과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하려고 투쟁한 노동조합을 ‘공갈·협박’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범죄 집단인 양 매도하며, 노조 활동가들을 마구잡이로 수사했다. 이에 대한 항의로 5월 1일 세계 노동절 날 아침, 양회동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이 ‘윤석열 정권을 무너트려 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분신했다. 이후 건설노조는 상경 파업을 벌이며 윤석열 정부 퇴진 투쟁에 나섰다.

전세 사기

계속된 생계비 위기

서이초 교사 사망과 교사 운동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폭로

건설노조 탄압 양회동 열사 분신



국내

< 노동자 연대 > 가 뽑은 2023년 10대 뉴스



윤석열의 한미일 공조 강화

3월 윤석열 정부가 배상금 제3자 변제안으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내동댕이쳤다. 일본의 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 또한 용인했다. 윤석열 정부가 “굴욕 외교”를 했기 때문이 아니다. 일본과 화해해 한미일 안보 공조 강화로 나아가려 한 것이다. 그럼으로써 윤석열 정부는 한국 지배계급의 위상을 높이려 한다. 비록 미·중 사이에 낀 처지이지만, 서방 제국주의를 지원하는 것이 여전히 한국 자본주의에 더 이롭다고 보고 선택한 것이다. 가령 4월 한미 양국은 미국의 핵무기를 더 자주 한국에 배치하기로 했다. 미·일 제국주의와의 동맹 강화는 지정학적 위험을 더 키울 것이다. 또한 한국 지배계급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계속 난관에 부딪힐 것이다.

범죄와의 전쟁

윤석열 정부는 흉악범죄 대처를 명분으로 공권력 강화를 추진했다. 서울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지자 정부는 주요 도심에 무장 경찰특공대와 장갑차를 배치해 계엄 분위기를 조성했다. 일선 경찰에는 무기 사용 확대와 검문검색 강화를 지시했고, 법무부는 엄벌주의를 공언했다. 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유아인, 지디, 이선균과 같은 유명인들을 떠들썩하게 수사했다. 전 녹색당 대표도 타깃이 됐다. 그러나 윤석열의 경찰력 강화와 엄벌주의는 범죄 예방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복합 위기 국면에서 정부의 권위주의적 수단을 강화하는 수단이었다. 범죄의 토양인 천대·빈곤·소외를 배양하는 체제를 수호하는 자들을 강화해서 범죄를 줄일 수 없다.

홍범도 홍상 철거와 역사 전쟁

윤석열 정부는 올해 ‘역사 전쟁’에 나섰다. 특히, 육사의 홍범도 장군 홍상을 철거하려 했다. 좌우 모두 업적을 인정한 독립 투사를 공산당 가입 경력을 문제 삼아 깎아내렸다. 심각한 경제·안보 복합 위기에 직면해 국가 전반을 우경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반감이 훨씬 더 컸다. 홍범도 관련 도서가 오히려 인기를 끌었고, 육사는 아직 홍상을 철거하지 못했다. 홍범도 공산당 가입 경력은, 혁명 러시아가 홍범도 같은 위대한 독립 투사의 신뢰를 얻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레닌의 러시아는 스탈린의 러시아와 달랐다. 한국의 독립운동에는 초기부터 국제주의적인 민족해방투쟁 전통이 있었던 것이다.

계속되는 언론 탄압

올해 대통령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뉴스타파> 등 정부 비판적 언론사와 기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어졌다. 이들은 모두 윤석열이 2011년 검사 시절에 대장동 투자의 중징도가 된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었다. <뉴스타파>는 김건희의 주가 조작 의혹도 줄기차게 보도했다. 또, 정부는 방송 장악도 시도 중이다. KBS 등 공영방송 이사진을 친정부 인사로 교체하고, YTN 민영화를 추진하고, ‘가짜뉴스 근절을 명분으로 정부 비판적 언론을 압박했다. 윤석열의 언론 탄압은 자신의 부패 의혹과 취약함을 가리려는 것이자, 그 자체로 권력 남용 부패 행위다.

이재명 수사와 구속영장 기각

윤석열 정부는 수천억 원 대장동 수익이 이재명 대선자금으로 들어갔으며 이재명을 공개적으로 범죄자 취급했다. 이런 압박의 결과, 9월 국회에서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민주당 기획주의자들과 정의당의 도움을 받아 가결됐다. 정적인 이재명을 증거도 없이 범죄자로 낙인 찍은 것은 이재명에게 기대를 건 개혁 염원을 낙담케 해 사기를 꺾으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증거가 없다며 구속영장신청이 기각됐다. 이재명 망신 주기가 공개적으로 실패한 것이다. 구속영장 기각 직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참패했다. 윤석열의 정적 수사는 이제 위선의 상징이 됐다. 총선 전망도 크게 어두워졌다. 한편, 체포동의안 가결에 협조한 정의당은 개혁 염원층에게 정치적 신뢰를 크게 잃었다.

지조를 잃지 않는다: 창원·제주 보안법 사건 담당 장경욱 변호사 인터뷰

올해 1월부터 국정원과 경찰은 창원과 제주에서 전국적인 지하 조직망을 가진 간첩단을 검거했다며 국가보안법 사건을 터뜨렸다. 이 두 사건 재판의 변호를 맡고 있는 장경욱 변호사(사진)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창원’ 사건은 현재 9개월째 진행 중이고 공판은 단 두 번 열렸다. ‘제주’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신청 후 항고·재항고 절차가 길어지며 공판이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그리고 구속 재판을 받던 피고인은 현재 모두 보석 석방됐다.

검찰과 우파들은 두 사건의 피고인들과 변호인단이 의도적인 재판 지연 책략을 펼쳐 공판이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장경욱 변호사는 원칙 있는 싸움에 ‘종북’ 딱지를 붙여 양심수들을 고립시키려는 노림수라고 반박한다.

윤석열 정부하에서 정권과 언론이 결탁해 1년째 계속 피의사실을 공표하며 국가보안법으로 탄압하고 있어요.

지금 검찰과 보수 언론들은 저희가 재판을 일부러 지연시킨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낸 국민참여재판 신청, 관할 법원 이전 신청,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 판사 고발이 다 그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권리들을 행사하면 안 되는 겁니까?

제가 피고인들에게 검찰 인권보호관 면담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면, 보통 그 첫날에 인권보호관들과 면담해요. 그런데 그 인권보호관이 검찰 지휘하에 있어요. 독립적이지도 않고, 권한도 없죠. 그래서 면담을 거부했는데, 그것조차도 ‘종북’ 물이 소재가 되더라고요.

진술거부권 행사와 강제 인치 문제도 있습니다. 진술을 거부할 건데 왜



창원·제주

[국정원에] 가서 앉아 있어야 하죠? 하루 종일 앉아서 묵비할 사람 앞에서 계속 묻고 또 묻는 것, 그래서 사람을 무기력하게 하는 것들이 고문이 아니면 뭐니까?

강제로 끌고 갈 테면 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소하고 공수처에도 직권 남용으로 걸겠다고 했어요.

피의사실 공표

그렇게 거부하고 국정원에 강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하면서 [피고인들]이 싸운 거예요. 끌려가다 다치기도 하고, 이에 저항해서 ‘창원’ 사건 피고인들이 단식했는데 제일 길게 하신 분이 40일 이상 하셨죠.

국정원은 제가 피고인들에게 단식과 묵비를 체계적으로 교사하는 배후이고 심지어 북의 지령을 받아서 하는 것처럼 말해요. 강제 인치 거부도 북의 지령이라고 해 버리면 그만이죠.

하지만 저는 조언을 할 뿐입니다. 우리 양심수들이 공익과 대의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우리가 형사소송법을 원칙대로

로 지켜서, 국민들이 판사 권력과 국가보안법 앞에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걸 행사하려면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돼요.

강력히 저항하고 대의를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상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어요.

물론 어려움은 있죠. 판사를 고발하면 패소죄가 되고요.

하지만 저는 형사소송법상 원칙대로 다 하도록 해요. 예를 들면, 제가 판사하고 싸웠어요. 판사들과 제가 얘기한 게 조서에 다 나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판사들은 자기한테 불리한 내용은 [조서에서] 뺄 수 있어요. 재판 진행이 파행적이거나 고압적이었음을 조서에 남기지 않으려 하죠. 예를 들어 피고인 신문하면서 실제로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는데, [조서에는] 했다고 써 놓는 거예요. 허위 공문서 작성이죠.

그래서 제가 녹음을 증거로 내면서 이렇게 경고했어요. ‘공판 절차상 조서에 의해서 고지하거나 조서가 작성되지 않더라도 구두로 고지해야 하는데 그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면, 그날의 공판은 무효입니다.’ 이거를 재판 지연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당연한 권리 행사예요.

제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낼 때, 검찰은 재판이 굉장히 공정하다고 말하며 재판부를 옹호했어요. 그런데 재판부가 새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는 검찰 요구를 거부하고 보석을 허가하니, 이제 검찰은 판사들이 피고인 측에 ‘쫓아서’ 그렇게 했다고 해요. 황당하죠. 진실은 그게 아니라, 재판부가 최소한의 양심을 발휘해 뒤늦게나마 보석을 해 준 거예요.

이렇게 불공정 재판의 우려가 많지만, 판사 기피 신청이 인용된 사례는 거의 없어요. 재산이고 뭐고 다 날릴 때까지 법원 앞에서 인생을 걸어 버리는 사법 피해자들이 많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당했을 때 그런 불평등과 불공정에 맞선 인간의 저항이라는 게 엄청나요.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 중에 그런 문제도 개선돼야 하죠.

표적

국가보안법 재판은 기본적으로 충돌이고 저항이에요. 원칙대로 하면서 여러 가지 부당한 것들이 조금씩 변모돼 온 거예요. 지금 이 역사도 시국 사건들에서 저항하면서 쟁취해 온 거고요.

‘그래도 옛날에는 마구잡이로 연행하고 구속했지만 지금은 안 그러지 않냐.’ ‘제가 진전된 거를 너무 평가하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본질은 똑같아요. 물론 지금은 사찰을 옛날만큼 안 하고 딱 표적이 된 단체에 하죠. 하지만 이렇게 표적을 삼아서 나머지 전체를 길들일 수 있다는 본질은 여전히 그대로인 거예요. 이런 본질을 놓쳐 버리면 국가보안법이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표적된 것을 회피하면 되니까요. 가지 말라는 곳에 안 가고요.

저항하면 탄압이 있고, 탄압이 있는 곳에서 또 저항이 발전되고 운동이 단결해 탄압 세력보다 압도적인 힘을 일으켜 기존의 체제를 바꿔 나가는 거잖아요.

현상 유지에 머무르지 말고 더 큰 저항과 모범을 만들어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우리의 역량을 축적하고 탄압을 극복할 돌파구를 낼 수 있습니다.

인터뷰·정리 김승주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해 역대급 긴축 예산안 통과시키다

12월 21일,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총액이 지난해에 견줘 2.8퍼센트 증액됐는데, 올해 물가 상승률이 3.6퍼센트인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삭감된 것이다. 역대급 긴축 예산이다.

교육, 고용, 의료 예산 등이 큰 폭으로

삭감됐다. 교육 예산은 6조 원 이상 삭감됐고, 고용노동부 예산도 3.6퍼센트, 보건·의료 예산은 17.5퍼센트 줄었다.

지방교부세도 8조 원 넘게 줄어 11.3퍼센트 감소했다. 지방정부 재정은 복지와 공공 서비스에 사용되는 비율이 중앙정부보다 크기 때문에, 지방

교부세 삭감은 서민층 복지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민주당은 정부가 예산안을 냈을 때 비판했지만, 결국 국민의힘과 합의해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요구로 일부 예산안을 손봤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국

민의힘이 100을 깎자고 요구하자 민주당이 90만 깎자고 합의한 꼴이다. 그래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도 “민주당이 확대 재정 요구를 거두고 정부 예산안의 기본 철학에 동의해 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 13면으로 이어짐

정부·여당,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유예 추진

민주당도 사용자들의 환심을 사려고 찬성할 듯

12월 7일 대법원은 고 김용균 씨 산재사망 책임 문제를 놓고 한국서부발전 전 대표 김병숙 등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2심 무죄 판결에 대한 유족의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사용자에게 산업재해 책임을 묻는 것은 그만큼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대책 의무를 다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의 무죄 판결은 사용자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이 판결은 때마침 정부·여당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적용을 2년 더 미루려고 하는 시점에서 나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고 김용균 씨가 2018년 12월 사측의 안전 책임 방기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제정됐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유예 추진과 대법원 판결은 맥을 같이 한다. 이는 산업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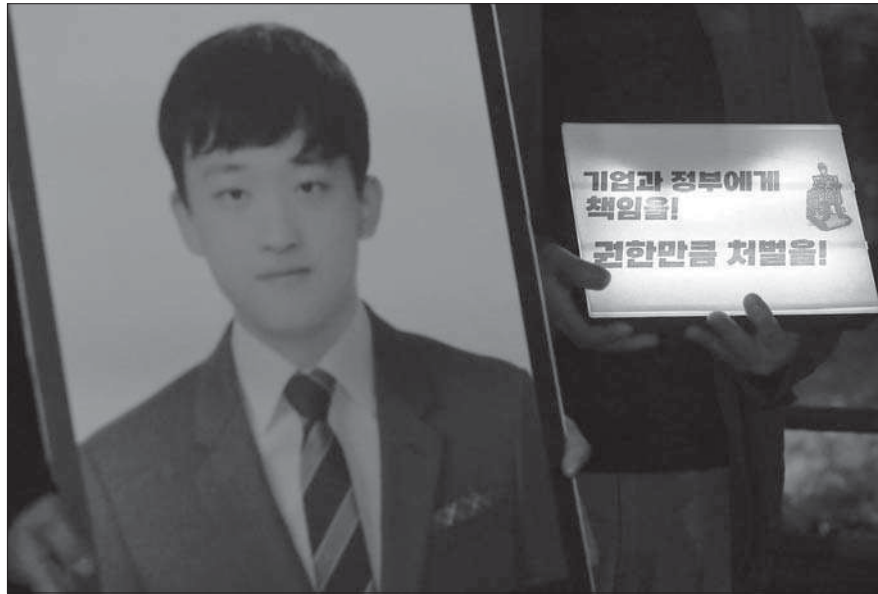
법 적용을 5년이나 미룬다고?

중대재해처벌법은 대중의 공분 속에서 제정됐지만, 만들어질 때부터 사용자들의 강력한 반발을 받았다. 사용자들을 지나치게 규제하고 비용 부담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당시 사용자들과 사용자 언론들의 아우성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약속한 민주당은 원안에서 처벌 수준과 범위를 대폭 완화했다. 게다가 사용자들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법의 시행을 1년 유예했다.

그도 모자라 국회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후 2년 유예)”고 추가로 단서를 달았다.

결국 정부의 전면 적용 연기 방침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을 5년이나 미루겠다는 것이다.



고 김용균 씨 사망 관련 대법원 판결과 윤석열의 중대재해법 무력화 시도는 서로 연결돼 있다

그러나 중대 산업재해의 80.8퍼센트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산재 사망자만 1만 245명에 이른다. 법 시행을 3년이나 유예받은 기업들이 또다시 준비 부족과 비용 부담을 핑계로 대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

게다가 경찰·검찰·법원은 이미 수사 단계에서 많은 사용자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상당히 ‘유예’해 주고 있다. “법 적용 대상 중대재해가 450건 이상이나 기소 30건 미만, 판결 10건 미만으로 법 집행 자체가 미미한 상황”이다(민주당).

이런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유예는 주류 정치인들과 사용자들이 노동자의 건강과 목숨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를 드러낸 것이다.

기회주의

민주당·한국노총 같은 노동조합뿐 아니라 정의당·진보당 등 원내 좌파 정당들도 개악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사실상 찬성으로 기울었다. 조건부 찬성(유예에 대한 정

부의 사과, 유예 해당 기업들에 대한 정부 지원, 2년 뒤에는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사용자 단체의 약속)을 내세우지만, 이는 찬성을 위한 구실일 뿐이다.

여당이 조만간 당정 협의를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 대책에 1조 원 이상을 투입하는 방안을 확정한다는 보도가 12월 25일 나왔다. 민주당에 화답하는 모양새다.

사용자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를 놓고 “협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윤석열 정부의 내년 긴축 예산에도 합의해 줬다.

민주당 이재명 지도부는 당 안팎의 보수적(“통합”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는데, 이는 당의 지지율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오히려 총선 승리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본지 486호 “이낙연의 공세는 보수적 압박이다”를 보시오.)

지배자들은 국민의힘을 선호하지만, 제2선호 정당인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에도 대비해 그 당이 친사용자적이 되도록 압력을 넣는 것이다.

이재명 지도부는 개혁 염원층뿐 아니라 사용자들의 지지도 바람에 기회주의적 줄타기를 하고 있다. 이는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기업인들의 이익을 잘 대변해 지지를 얻고자 국민의힘과 경쟁하는 친자본주의 정당이기 때문이다.

당이 기본적으로 기업인들의 이익을 잘 대변해 지지를 얻고자 국민의힘과 경쟁하는 친자본주의 정당이기 때문이다.

대정부 투쟁

지난 11월 민주당총은 산재 사망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증가 추세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등장 직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는데, 윤석열 정부 등장 이후 산재 사고가 더 늘었다는 점은 시사적이다. 법 자체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 산재 예방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래로부터의 대중 투쟁이 중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 때 민주당총과 정의당 등의 개혁주의적 지도자들은 ‘내용이 좀 후퇴해도 법안 통과가 우선’이라는 근시안적이고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민주당의 원안 대폭 삭감을 받아들였다. 입법 자체를 중시하다가 불필요하게 타협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또한 윤석열 정부 등장 이후 의욕적으로 대정부 연대 투쟁을 건설하지 않아 왔다.

지금 노동계 지도자들은 대부분 민주당의 조건부 찬성론을 비판하지만, 결국 아래로부터의 대중 투쟁보다는 국회에서 일단 민주당이 막아 주기만을 바라고 있다. 좌파적 사회민주주의 정당인 노동당도 “민주당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법은 예정대로 시행된다. 국회 다수당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데 그치고 있다.

앞서 지적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대중 수준의 연대를 중시하고 투쟁을 전면화해 사용자 계급 전체를 압박하지 않으면, 조그만 개혁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다.

김문성

▶ 12면에서 이어짐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부자 감세안도 통과시켰다. 결혼 자금을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게 하고, 기업주가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줄 때 내야 하는 증여세의 최저세율(10퍼센트) 구간을 현 60억 원 이하에서 120억 원

이하로 올렸다.

지난해 법인세 등 부자 감세를 대규모로 해 준 탓에 올해 세수가 줄었고, 건진 세금에 따라 자동으로 배분되는 교육 예산과 지방교부세 등은 그 때문에 이미 큰 타격을 받은 바 있다. 그런 데도 또다시 감세를 한 것이다. 그야말로

로 서민 주머니 털어 부자들을 지원한 것이다.

민주당이 이런 예산안을 합의한 것은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그 당이 노동자 등 서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세력이 아님을 보여 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는 달리 개혁

염원 대중의 환심을 사고 그들의 불만을 달래려 한다. 하지만 결국은 지배계급의 낙점을 받아 집권하려 하기 때문에 경제 위기를 지배계급에게 유리하게 해결하려는 긴축 재정 기초를 반대할 수 없다.

정선영

국회 다수당 야당 민주당

개혁입법 약속 배신하거나, 누더기로 만들거나

김승주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21대 국회의 임기 만료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2022년 5월부터 시작된 윤석열 정부 대부분의 기간에 민주당의 수장은 윤석열과 접전을 벌였던 대선 경쟁자 이재

명 대표였다.

그러나 지난 1년 반 동안 이재명의 민주당은 진보 염원 지지자들의 기대에 턱없이 못 미쳤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자 등 서민층 공격을 막아 내기는커녕 정부·여당의 개악안이나 누더기 타협안에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기업 감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 특혜 감세를 비판했다. 그러나 그해 말 민주당은 정부의 2023년 기업 감세 예산안을 “대승적 양보”(이재명 대표)라며 합의해 줬다.

“부자 감세를 저지하겠다”던 민주당의 애초 약속과 달리, 여야 협상의 쟁점은 감세의 폭 문제로 슬쩍 옮겨갔다.

가령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 문제에서 정부·여당의 안은 최고세율을 25퍼센트에서 22퍼센트로 낮추는 것(17조 원가량 인하)이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이 내놓은 절충안은 감세의 폭만

조금 줄이는 것(과세표준 전 구간에서 각 1퍼센트씩 인하)이었다.

이로 인해 기업주들은 향후 5년간 14조 원에 가까운 법인세 인하 혜택을 보게 됐다.

2023년 3월 정부·여당과 민주당은 반도체 기업들에 최대 35퍼센트에 달하는 투자세액공제를 해 주는 K칩스법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반면 복지 예산은 물가상승률과 노인 인구 증가율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으로 삭감됐다.

며칠 전인 12월 21일 통과된 2024년 예산안에서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역대급 긴축안에 합의했다.

전세 사기 특별법

2023년 1월에는 집값 하락과 함께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 사례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안타깝게도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들의 사례도 거듭 나왔다.

그러나 5월 말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전세 사기 특별법을 누더기로 합의해 통과시켰다.

피해자들의 바람과 달리, 이 누더기 특별법의 핵심 내용은 즉각 구제가 아니라 대출을 더 해 주겠다는 것이었다.

안전운임제

민주당은 2022년 7월 화물연대 지도부와 협의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법을 발의하고, 이재명 대표는 이를 민생 개혁 22대 입법 과제 중 하나로 약속했었다.

그러나 그해 12월 화물연대의 파업 투쟁이 범정부 차원의 탄압에 직면하자, 민주당은 중재자를 자처하는 듯하다. 더니 덜컥 일몰제 폐지 약속을 뒤집고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국회 소위에

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어렵게 파업을 이어가고 있던 화물노동자들의 뒤통수를 친 것이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의 3년 연장안도 무시하고 안전운임제를 올해 3월부로 일몰해 버렸다.

이후 화물 노동자들은 임금에 큰 타격을 입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3년 연장안조차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를 기피한다.

노란봉투법

화물 노동자들의 요구 중에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도 있었다.

노란봉투법은 애초 노동자 쟁의를 옥죄는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려는 취지에서 제기된 것으로, 이후 하청·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9월 노란봉투법을 “7대 중점추진과제” 중 하나로 선정해 조속한 통과를 약속했다.

그러나 올해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통과시킨

법안에서는 노란봉투법의 알맹이인 손해배상의 청구 제한과 노동조합원 개인 부과 금지 내용이 빠졌다.

개선된 조항은 개인별 손해 책임 범위를 정하고,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면제하는 수준에 그쳤다.(그러나 이마저도 정부와 기업주들은 반대하고 있다.)

법안 후퇴 당시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윤석열이 거부할 만한 ‘무리한’ 개혁을 시도하기보다는 누더기 타협이라도 하는 게 낫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이에 아랑곳않고 지난 12월 1일 거부권을 행사했고, 노란봉투법은 최종 폐기됐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도 비슷한 이유를 댔다.

유가족의 요구로 추진되고 있는, 특검을 요구하고 독립적인 진상규명 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이 특별법은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야당들의 공조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협상 과정에서 참사 피해자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조사 위원 수를 줄이고, 조사 대상이 조사를 거부할 시의 처벌 내용을 형사 처벌에서 과태료로 낮추는 등 타협을 했다.

담당 소위원 행안위의 안전조정위원장인 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여야 합의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염두에 두고 유족 의견을 다 반영하지 못

하는 점을 감수”했다며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누더기 법안에조차 반발하면서 최종 행안위 표결에 불참했는데 말이다.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어떻게든 합의에 이르러 하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여전히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12월 28일 본회의를 앞두고, 민주당 소속 국회의장 김진표는 특검 요구 권한을 없애고 법 시행을 내년 4월 총선 뒤로 미루자는 더 후퇴한 중재안을 내놔다.

민주당은 이를 수용하고 국민의힘에 합의를 압박하려 한다. 이 때문에 법안은 한층 더 누더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그마저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른쪽으로 양보하고 타협하면 할수록 우파의 기만 살릴 뿐이다.

대통령 거부권?

과연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허용해 주는 선에서 개혁을 추진한다면 그게 제대로 된 개혁이 될 수 있을까?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위협) 때문에 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고 변명하지만, 실상은 민주당이 대통령 거부도 전에 먼저 꼬리를 내린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사회운동과 노동운동 지도자 중 온건파들을 포섭해 기층 운동을 통제하려는 포퓰리즘 전략을 취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노골적인 지배계급 정당인 국민의힘과 약간의 차이는 있다. 그러나 친자본주의 정당으로서 자

본가 계급의 낙점을 받아 집권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두 당은 차이보다 공통점이 더 크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또한 경제 침체에 처해 있는 한국 기업들의 처지를 걱정하고, 그들의 지지와 인정을 구하려 애쓴다. 그래서 정부·여당과 번번이 갈등하면서도 기업주들의 필요에 대해서는 [앞서 봤듯이] 번번이 ‘협치’로 임한다.

이것이 민주당이 개혁 약속을 쉽사리 내팽개치고 보잘것없는 행보를 걷는 본질적인 이유이다.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하고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크겠지만, 노동자 운동과 피차별 사회운동은 개혁의 동력을 민주당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서평 | 《가짜 사랑 권하는 사회》

병든 사회가 병든 사랑의 근원임을 보여 주다

오늘날, 성공은 누구나 할 수 없더라도 사랑만큼은 누구나 이룰 수 있다고 여겨진다. SNS부터 드라마까지 모든 곳이 사랑에 대한 얘기로 넘쳐난다. 아름다운 가족에 얘기부터 천생연분의 짝 얘기까지. 그러나 오늘날 사랑만큼 얻기 힘든 것도 없다. 또한 교제(데이트) 폭력, 아동 학대,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처럼 사랑만큼 그 이름이 폭력으로 얼룩진 것도 없다.

왜 이렇게 우리는 사랑에 목을 매고, 사랑하더라도 불행할까?

《가짜 자존감 권하는 사회》, 《가짜 행복 권하는 사회》 등의 저서로 유명한 김태형 씨가 최근 사랑에 관한 신간을 냈다. 신간 《가짜 사랑 권하는 사회》(갈매나무)는 '진짜 사랑'을 잃어버린 한국 사회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저자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로 인해 '가짜 사랑'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다고 지적한다.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고립의 심화로 정신 건강은 더욱 악화됐다. 이처럼 신자유주의는 우리가 더 잘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을 파괴하면서도 사랑에 더 매달리도록 유혹하고 부추긴다.

“사람들이 과거보다 훨씬 더 사랑에 목을 매는 이유는 인간에게 사랑이 너무나 중요함에도 사랑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오늘날 인류가 자존감, 행복 등에 과거보다 훨씬 더 큰 관심을 보이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저자는 부모, 애인 등의 잘못된 '사랑'에 대해서 비판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기 때문'이라며 자녀를 경쟁에 더 깊이 밀어 넣거나, '사랑하기 때문'이라며 애인에 대한 과도한 질투나 폭력을 정당화한다.

특히 '금쪽 상담소'나 '결혼지옥' 등 요즘 한국에서 인기 있는 심리 클리닉 프로그램들을 보면, 모든 문제를 어린 시절 경험이나 개인의 심리, 부모의 양육 방식 문제 등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저자는 사회학자 올리히 벡의 말을 인용해 부모 탓하기의 한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한다. “사회가 부부의 어깨 위에 짊어 지워 놓은 사적인 고투와 고통이라는 점이 고스란히” 자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한국 사회에서는 부모가 느끼는 생존 불안이 너무 커서 이런 불안이 자식 압박으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결혼 시장

저자는 우리가 가짜 사랑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사회에 있다고 지적한다.

인간이 상품이 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마치 상품 교환처럼 사랑도 준 만큼 돌려받아야 하는 등가교환 논리가 작동한다. ‘결혼 시장’이라는 말이 보여 주듯, 사람끼리의 만남도 시장에서 상품 거래하듯 되곤 한다. 그 시장은 남성의 돈과 여성의 외모가 교환되는 장소이다. 또한 부모도 자식을 상품으로 간주하고, 자식도 부모를 현금지급기로서 인간 상품으로 간주하곤 한다.

신자유주의가 불평등을 키우고 사람들의 생존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든 데다, 건강한 사랑과 지지를 보내 줄 공동체도 거의 무너진 상황에서 사람들은 정신 건강 악화에 시달린다.

개인 간 경쟁이 심해지고, 서열 다툼이 치열해지는 상황은 연인 간 관계에도 스며든다. “상대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비해 자신이 상대를 덜 사랑해야 더 큰 권력, 더 높은 서열을 차지”하는 메커니즘이 반영된다.

이처럼 생존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괴로운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 심리 상담이나 자기계발 같은 것이 인기를 끌지만, 근본적 해결이 안 되고 미봉책일 뿐이다.

저자는 이렇게 지적한다. “행복에 관한 수많은 연구가 공통적으로 도달한

결론은 행복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이 관계나 공동체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다른 심리학 책들과 달리, 이 책은 사회 개혁을 요구한다. 인간이 돈보다 중요한 사회를 만들고 공동체를 재건하는 것만이 진짜 사랑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저자는 지적한다.

물론 이 책에 아쉬운 점도 있다.

동성 간 사랑이나 다양한 형태의 사랑이 현실에서 존재하는 상황에서 단지 ‘이성애’만을 전제하고 쓴 것은 아쉽다.

또한 저자가 (비록 이 국가들의 복지가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북유럽 복지 국가나 국가 개입을 대안으로 보는 것도 한계가 있다.

물론 이 나라들이 한국보다 나은 면들이 있지만, 이런 나라들도 신자유주의 정책이 대거 도입된 결과 불평등이 심화되며 정신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



가짜 사랑 권하는 사회

김태형 지음, 갈매나무, 252쪽, 17,500원

다. 근본에서 인간 관계의 소외는 자본주의 자체에서 비롯된 현상이다.

그러나 저자가 '진짜 사랑'의 회복을 위해 지적하는 바들은 의미 있다.

양효영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좌파 주간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wspaper.org/subs2

구독 문의: 02-777-2792, ws@wspaper.org



wspaper.org/online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f 노동자 연대 @wspaper
wspaper_org 노동자연대TV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 “노동자 연대” 검색

▶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노동자 연대>와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ISSN 2005-8217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사업자 명창 (주)레프트미디어 제호: 노동자 연대
발행인월일장간호: 2009년 3월 14일 인쇄인 주디앤코리아 현재호: 서울다08179 (주간)
등록인월일 2009년 1월 12일 주소: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6 4층 전화: 02-777-2792
제보: 02-777-2791 팩스: 02-6499-2791 email ws@wspaper.org

▶ 16면에서 이어짐

만 원에서 억대의 손실을 볼 수 있다.

게다가 야당의 이런 안조차 국회에서 여당과의 합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후퇴할 공산이 크다. 야당들은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 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해 무산시킬 수 있다면 여당과의 합의를 추구하고 있다.

상반기에 전세 사기 특별법이 누더기가 되는 과정이 정확히 이랬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이번에도 이런 후퇴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진정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도입하려면 국회가 아니라 기층에서 투쟁과 연대를 키

우는 것에 우선순위를 뒤야 한다.

전세 사기는 근본적으로 정부의 잘못된 주택 정책으로 빚어진 '사회적 재난'이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전세 보증금을 정부가 온전히 보상하라고 요구하며 더 많은 피해자들을 모아 운동을 더 크게 건설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최근 대전, 수원, 대구 등 지역별로

청년층을 중심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가 새롭게 꾸려지고 확대되는 등 피해자들의 행동이 성장할 가능성도 생기고 있다.

전세 사기나 깡통전세 피해는 서민들에게 큰 불안감을 주는 사회적 문제이다. 따라서 운동을 키워 간다면 더 많은 지지와 연대를 모을 잠재력이 있다.



전세 사기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라

서지에 전세 사기 피해자

12월 21일 최강 한파 속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국회의사당 앞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이 만들어진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실태 조사 한 번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 하나 내놓은 게 없다. 피해자들은 이를 강력히 성토했다.

지난 6월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1만 곳이 넘는 가구가 공식적으로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정부의 피해자 인정 기준이 너무 높은데다 지원도 너무 적다 보니 피해자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실제 전세 사기 피해는 수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특별법이 나온 이후에도 대전, 수원 등 곳곳에서 집단 전세 사기가 터져 나오고 있다. 집값이 하락하면서 강통전세,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자들이 대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 가구 중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17.5퍼센트에 불과하다(한국도시연구소와 주거권네트워크 등이 피해자 대책위와 함께 실시한 실태 조사). 다가구, 신탁 주택 등 지원 사각 지대에 놓이기 쉬운 경우를 비롯해 실질적 대책 없이 집에서 쫓겨나가거나 빚더미에 앉은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해자로 인정받아도 은행이나 정부 기관을 찾아 가면 ‘당신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뿐이다. 그마저도 다른 기관으로 떠넘기기 일쑤”라고 지적했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전세 사기 피해자는 “정부, 임대인, 은행의 책임이 너



비밀이름 제공

누더기로 통과된 특별법 때문에 상당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12월 21일 국회 앞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기자회견

무나도 명백한 전세 사기의 책임을 왜 오롯이 피해자들이 감당해야 하나.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특별법과 지원 대책을 만들어 달라”며 호소하기도 했다.

전세사기·강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정부와 국회에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이 담긴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먼저 지급하고 추후에 경매 등으로 자금을 회수하라는 것이다.

이 요구에는 정부가 책임지고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떼이지 않게 해 주길 바라는 염원이 담겨 있다. 또, 선 구제를 받는다면 피해자들이 빚을 짊어지고 개별적으로 경매에 매달려야 하는 현실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전세 사기 특별

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 2만 6738명의 서명도 외면하고 있다.

전 국토부 장관 원희룡 등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세 사기는 개인 간의 계약에서 받은 피해이지 사회적 재난이 아니”라며, “정부가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미분양으로 인한 건설사들의 이윤 손실에는 혈세를 척척 쓰면서, 정부의 주택 정책 실패로 인해 피해를 본 전세 사기, 강통전세 피해자들에게는 한 톨이 아깝다니. 서민들을 대하는 이 정부의 민낯과 그들의 우선순위를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민주당과 정의당의 개정안

민주당과 정의당이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이 담

겨 있다. 그런데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밝혔듯, 두 야당의 안은 피해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100퍼센트 보상하는 것이 아니다. 경매 시 감정되는 시세를 기준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세가보다 집값이 싼 강통전세 피해자 다수는 큰 손해를 감내해야 한다. 여전히 울며 겨자 먹기로 ‘셀프 낙찰’을 받기 위해 경매에 매달려야 하는 세입자들도 상당할 것이다.

또,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후순위 피해자들의 경우 보증금을 대부분 날려야 하는 문제도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보증금을 최소 30퍼센트 이상, 정의당은 50퍼센트 이상 보상해 주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는 전세금을 한 톨도 돌려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피해자들이 주택 시장 경기 악화로 수천

▶ 15면으로 이어짐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 구독
♡ 좋아요
🔔 알림설정



- 다양한 주제의 온라인 토론회 영상
- 팔레스타인에 연대를 저항, 역사, 전망
- 주요 시사 이슈 팩트부터 논쟁점까지
- 현대 중국의 모든 것 12강
- 570여 개 콘텐츠 체계적 분류
-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10부작

지금 구독하세요!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을 보내 드립니다.

이슬람주의(정치적 이슬람)를 어떻게 봐야 할까?

1월 17일(수) 오후 8시

발제 시문 아사프

레바논 마르크스주의자로 현재 영국에서 활동. 레바논의 좌파 언론 '알 민수르'와 '퍼블릭 소스'의 편집위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당원.

※ 전문 통역사의 순차 통역이 제공됩니다.

참가신청
bit.ly/0117-meeting
토론회 당일 오후 7시 30분에
유튜브 접속 링크를 보내드립니다.